

“동아시아 냉전과 다원주의 시각”

연사: 권헌익(서울대 인류학과 초빙교수)

사회: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일시: 2014년 10월 20일(월) 4:00 - 6:00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대 336호

<강연>

권헌익: 몇 년 전 런던대학에서 인류학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국제정치학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학문분과로서는 1차 대전 전후 소위 미국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재밌는 점은 인류학은 2차 대전 전후로 영국중심의 사회인류학에서 주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류학사에서 1930년도와 1940년도 초까지는 친족연구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국제정치학에서 친족연구는 가족연구, 동네연구, 민족연구라고 생각이 될 것이다. 당시 인류학자들은 친족연구를 국제정치학 연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였다. 오늘날에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접경지역 혹은 시리아 내의 분쟁문제 등을 보면 부족구조(tribal structure)와 정치구조(political structure)의 역학관계가 중요한 변수이다. 1930년대 인류학의 지적조상들이 주로 연구했던 지역은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으로서 아랍의 문화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아프리카 지역, 이슬람으로 통합되지 않은 지역들이었다. 여러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부족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혈연, 통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 부족과의 적대부족 또는 통상부족관계 이해에도 친족관계 이해가 중심이다. 즉, 국제정치에서 다루는 동아시아의 질서 또는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질서를 이해하는 것을 인류학에서는 친족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2차 대전 전후를 거쳐 인류학계에서는 어른들의 고집이 있었는지 또는 나태했는지 모임을 계속 이어 나갔는데 마이어 포르테스(Mayer Fortes)가 주도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소위 부족국가들이 탈식민 과정을 거쳤는데, 탈식민 과정은 많은 3세계 영역에서는 기존의 부족사회가 국가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독립, 즉 세계가 제국에서 벗어나서 민족자결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제국 또는 민족국가의 개념이 부재했던 부족의 삶이 민족국가로 포함이 되는 과정이다. 여기서 더 이상 친족, 부족관계 연구로 국제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실증적인 터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국제정치학이 하나의 틀을 잡아갈 때 기존의 친족연구도 새롭게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것이 힘들었던 것 같다. 인류학의 지적조상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현재 인류학과 글로벌 히스토리에 관심있는 학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제약이 있다.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인류학의 토대에서 국제정치학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고, 그 안의 국제정치학적 인식이 2차 대전 종전 이후 탈식민 과정에서 소위 영향력(sphere of influence)을 잃어버렸다. 역설적으로 탈식민이 인류학에는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 냉전연구에서의 다원주의 시각”인데 다원주의 시각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부족, 친족체계(system of kinship)와 정치체제(political system) 세 가지가 연결되는 쪽에서 인류학이 약해지는 상황이고, 국제정치학의 시작이 인류학의 국제

정치학적 시각/영역의 약화와 동시에 벌어진다. 제가 냉전사를 볼 때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시각에 말씀드리자면 인류학에 참여하지 않는 여타 사회과학에서는 현대 인류학을 볼 때 일종의 문화적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강한 학문으로 본다. 체제론, 정치 체제론이 우리(인류학)에게도 있었다. 현재의 입장에서 인류학을 볼 때, 안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화적인 상대주의 혹은 낯선 곳에서 자신을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역사학자도 낯선 시간대에서 자신을 만난다. 국제정치학도 낯선 스케일에서 자신을 만나고 국제체제 안에서 자신을 만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경한 것은 아니다. 낯선 곳, 티벳 등에 가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인류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려는 것을 왜 하는가? 이는 남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 과거의 시대, 시간을 공부하려는 역사학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간적인 영역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강하다고 느껴지는 인류학의 현재적인 모습에는 또 다시 2차 대전의 모습이 있다. 인류학 내의 국제정치학의 체제론이 약화되고 국제정치학이 분과로서 급성장하고 동시대의 인류학 내에서, 유럽 인류학이 아니고 북미중심의 인류학에서 문화적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성장하였다. 거기에서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와 같은 학자이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영국사 전공자인 피터 맨들러(Peter Mandler)는 미드의 전기를 썼다. 마가렛 미드가 어떻게 냉전에 부딪쳐 패배를 했는가에 대해 다루었다. 북미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패러다임에서 1941년부터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국제 질서는 인류학자가 중심에 가서 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국제정치학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권력, 현실주의가 정립되어간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culture)’를 가져와서 새로운 국제체제를 형성해야 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맨들러에 의하면 이는 간단하게 설명된다. 각 문화,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 등 각 주권(sovvereign entity)들이 각자의 자율성(autonomy), 정치적 주권을 갖게 되었는데 문화에서 주권의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식이 다른 자율성, 주권을 인정한 국제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떻게 차이를 인정한 세계를 만드는가(how to make the world to safe for differences)이다. 사상, 체제의 배경이 다 다른데 이러한 다름에 의해 서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상대를 없애고, *raison d'etre*를 하지 않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만드는 국제체제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사족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체제론이 더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은 세계가 반쪽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여기에 한국전쟁이 크게 기여를 했다. 마가렛 미드가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고, 인류학이 국제정치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지적지형(intellectual landscape)을 생각했다가 상심하게 되는 계기가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동서관계가 급격하게 군사화되었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미국의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들의 담론에서는 이데올로기적 이원성(ideological duality)안에서 제약되는(contained) 다원주의라고 생각되었다. 상대의 에스니시티(ethnicity) 등을 배우겠다고 하지만 문화적 특수성이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에서 벗어날 때는 용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카르노 후기의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라고 명명할 때, ‘인도네시아식’은 괜찮은데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가 중국의 것과 가까워지는 수사는 용납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다원성은 용납 못하는 다원주의였고, 그렇게 변질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한국전쟁이었다. 미드는 심지어 자서전에 코리야는 발을 들이기도 싫다고 했을 정도로 한국전쟁이라는 한반도의 사건이 미드, 루스 베네딕트(Ruth Fulton Benedict) 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독일 뮌스터 대학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지적역사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

원주의 시각이 물론 여러 측면이 있지만 패권적 다원주의 시각이 지구사(global history)의 수면에 떠오르는 것은 제국의 역사와 떨어질 수 없다. 독일의 역사도 19세기 중반부터 역사적 다원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제국을 만들려면 산업혁명도 해야 하고, 홉스 식의 정치학을 만들어야 하고 로크 식의 개인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도 만들어야 하는 수순을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제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독일 지식인, 철학자들은 그러므로 유럽의 과거에 대해 한편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던 점은 이를 다 따라가면 언제 제국이 될 것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탈중심화된 독일이라는 체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독일이 산업혁명을 그런 식으로 겪지 않음. 역사적 다원주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역사의 진보의 과정은 하나의 길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제국이 되는 길은 하나의 길만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즉, 여러 길로 제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일본에도 그러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 20세기 초반에는 제국이 안 되면 국가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선 제국이 되어야 하는 의미에서의 '제국'이었다. 제국이 되어 다른 영역들을 포함하면서 식민주의라는 형식을 통해 영역을 넓히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지만 한편으로 살기위해서 제국을 만든 측면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차 대전 전후로 역사적 다원주의가 미학적인 다원주의(aesthetic pluralism)로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독일 지식인들, 피카소 등이 제시한 관점주의(perspectivism)는 스페인의 지식인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후발 제국이 되고 싶어하는 쪽도 있으면서 과거의 제국이기도 했지만 살기 위해 제국이 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 이들의 입장에서 제국이 많이 빠지고 다소 민주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볼 때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였다. 제국, 왕, 지식인의 입장으로만 보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다층적 관점주의(multi-perspective)를 이야기했는데 그 때의 중요한 사건이 1차 대전이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냉전사 연구에서 다원주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냉전사 연구도 힘든데 다원주의 역사도 복잡하다. 이를 연결한다면 한편으로는 국제 냉전사의 여러 다민족적(multi-ethnicity), 다원성(plurality), 통일성(unity)과 다양성(diversity)의 문제가 있다. 일본의 냉전사, 한국의 냉전사, 중국의 냉전도 있고 냉전을 겪었지만 생각하기 싫어하는 냉전의 역사도 있다. 남북한의 관점에서 냉전사를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가? 혁명국가에서의 냉전사, 민족자결을 존재근거로 생각하는 냉전사. 남쪽처럼 냉전사가 과거엔 북한과 비슷하다가 민주화되고 글로벌화된 이후 냉전사를 더 다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냉전사적인 인식에서의 냉전사 등등 다양하게 생각하려는 생각 자체가 다양성에 포함이 되는 거의 다원성(plurality)이 있다. 이를 크게 하려면 동아시아에서 겪은 냉전사, 2차 대전 전후 유럽의 냉전의 역사 이 두 개가 냉전시대의 제국들. 제국의 입장에서 유럽의 냉전사와 동아시아의 냉전사가 분리될 때도 있고 상호적(reciprocal)일 때도 있다. 동아시아에서 사건이 터지면 유럽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하는 스탈린, 그 스탈린의 생각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다. 그리스 내전이 터지면 한반도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그리스가 되는 것처럼 제국의 입장에서 유럽의 사건, 역동성이 반대의 지역에서는 계속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 역동적이거나 동아시아 냉전은 실질적인 의미의 전쟁, 한국전쟁과 인도차이나 전쟁이 있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도 상당히 냉전을 냉전 같지 않은 정치적인 형태로 겪었고 대부분의 동아시아인들의 경험으로서의 냉전 아닌 냉전이다. 조지 오웰이 말한 것과 같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전쟁, 그들의 의미에서 적절한 용어였던 유럽적인 의미에서의 냉전이 있었는데 발칸반도, 그리스인들에게 이런 냉전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측면

에서 냉전이라는 말이 ‘말이 되는’ 전후의 유럽과, 냉전이라는 말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동아시아의 입장이 있다. 제국의 입장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고 연결되어 있지만 자신들이 연결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경영에서 연결되어 있다. 각자는 다르게 경험한 다름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초보적, 인류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문화가 아니라 역사가로서 다르게 경험하고 있고, 체제의 역사를 그 안에서 이해하려면 상호적인 통일성(reciprocal unity)을 이해해야 하고 그 안에서의 특정한 역사적 경로도 추적해야 하는 냉전사의 다원주의적 시각이 있다. 다원주의적 시각도 마가렛 미드의 전형으로서 20세기의 중반에 까지 제국의 흥망성쇠와 또 다른 제국의 형성이 되는 세계의 부분으로서 나오고 성장, 쇠퇴한 것도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시각과 냉전사 연구의 다원적 현실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말을 한다(speak to each other). 서로 익숙한 다원주의와 세계 체제 내의 냉전사의 전개에 있어서 두 영역이 어떻게, 왜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는가? 냉전의 역사라고 했을 때 다원적 경험이 상당부분 소외되는 부분에서 체제론으로 전개가 되는가? 시스템 이론의 성장의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냉전사 연구의 다원주의 시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다. 냉전사 자체가 다원주의적이었으므로. 그 때는 통일성과 다원주의가 공존할 때의 다원주의이고 냉전사가 다원주의가 되는 제국들의 상호작용(interplay)을 만드는 이념적인 동력이었다. 역사적 다원주의와 냉전사의 전개는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이상하게끔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일이 있다.

다원주의 시각의 비교역사 문제이다. 동아시아 내의 비교가 있고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교가 있다. <또 하나의 냉전>에서 동아시아 안에서의 냉전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유럽의 큰 부분의 비교로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난주 창작과 비평에서 백낙청 교수 등과 행사에서 급진적 다원주의(radical pluralism)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스페인 철학자, 피카소 등과 동아시아 냉전으로 와서 월러스타인 세계체제론 논의하였다. 월러스타인은 1968년을 지구적 혁명(global revolution)으로 정의하였다. 당시는 베트남 전쟁의 와중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베트남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민간학살이 있었고 반전 데모가 크게 일어났다. 소위 미국의 양심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한국전쟁에서 그런 충격을 받았어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했다. 당시 미국의 버클리, 보스턴,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동시다발로 반전 학생운동이 나타났다. 푸코, 데리다 등도 다 국가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조용했고 독일, 베를린 쪽은 난리였다. 동경, 오사카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월러스타인은 이를 보면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지구적인 동시다발의 혁명, 지적인 혁명이라고 보았다. 동아시아 냉전 구도에서 유사함과 차이를 보자면 차이를 강조하는 다원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일본은 냉전 전체 과정을 거쳐서 가장 냉전을 서구와 흡사하거나 흡사해지려고 한다거나 서구처럼 생각하는 듯 하면서 서구와 가장 흡사하게 냉전을 경험하였다. 이에 1968년도에도 일본 지식인과 학생들은 파리의 지식인, 학생들, 미국, 독일과 동시다발로 반전운동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2차 대전 전후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반란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1968년의 혁명이 있었고 북한, 베트남에서도 그러하였다. 각 시대를 살면서 각 지역에 있으면서 한반도와 중국, 베트남 등이 각각 다르게 경험하였는데 이들이 경험한 것은 베트남은 전쟁 중이었으나 냉전이 격화되어 표현되면서 폭력적으로 겪어나 경직된 체제로 겪어나 그런 권위주의(authoritarian)이나 격화된 내전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베트남 전쟁 상황에도 중국이 깊게 개입하였고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의 개입이 있었고, 남북관계가 전쟁 일보의 직전이었다. 엄청나게 서로의 내

전에 개입하고 서로의 주권에 개입하고 냉전을 다시 격화된 의미에서의 지구적 내전(global civil war)으로서의 확전 가능성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일본은 지구적 혁명(global revolution)을 겪었다. 다양한 상황의 동아시아 냉전의 다양한 모습을 국제사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계의 그림을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얼마나 수렴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국제관계를 봐도 다원적인 역사에 대한 관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남북관계를 하나의 예로 든 것처럼 냉전사 연구를 90년대 중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냉전사는 지구적 역사의 의미가 있다. 저의 다원주의는 신 냉전사와 관련된 의미의 다원주의이다. 여기서 중요한 측면은 90년대 중반 이전의 냉전사가 유럽, 아시아를 상호적인 관계로 보는 두 제국의 상호적 관계 중심의 관계사였다는 것이다. 두 제국, 두 진영의 관계사를 보는 것이 냉전사의 주류 담론이었다면, 이후는 피카소의 큐비즘과 같다. 하나의 그림, 평면에 두 측면, 두 가지의 앵글,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한 평면에 두 관점을 어떻게 재현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신냉전사는 두 제국의 상호적 관계 안에 동아시아와 유럽의 상호적인 관점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두 상호적인 관점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빠지는 것은 동아시아, 제 3세계의 냉전사의 한 부분에서 탈식민주의의 역사와 냉전적인 측면의 역사가 양가적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탈식민지의 문제가 여기서는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다. 제국이 이야기할 때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행위자들로 보인다. 유럽은 영토의 문제, 군사동맹의 문제, 베를린 장벽, 냉전으로서 전쟁이 아닌 전쟁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문제였다. 동아시아에 오면 냉전이 아니고 냉전과 민족자결/탈식민의 문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의 문제였다는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와 제 3세계의 양가적인 측면, 유럽과 다른 탈식민 냉전(post-colonial cold war)의 측면, 한국의 해방전사의 문제, 한국전쟁 이해의 문제, 분단의 문제, 북한 이해의 문제가 다 포함되는 의미이다. 민족국가 형성의 문제와 분단의 문제가 아직까지 연동되어 있는 의미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신 냉전사이다. 글로벌 냉전사에서 탈식민적 냉전의 부분이 이전에는 주변적, 예외적인 것이었다. 한국전쟁은 예외적인 위치를 갖다가 그것이 예외가 아니라 '정상'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냉전사의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 냉전사에 점점 익숙해지는 우리 한국의 지성계, 우리의 모습과 글로벌한 체제가 통합과 다양성의 양 축에서의 이해가 다이나믹하게 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신 냉전사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냉전의 인식이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90년대 중반, 후반부터 현재까지 냉전의 개념을 거의 문헌에서 쓰지 않는다. 냉전이라는 말이 북한의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그 냉전의 개념은 '미소 강대국의 꽃놀이 판'으로서의 냉전이었다. 90년대 이전 지정학적 의미의 미소 제국 중심의 냉전사의 담론들이 북한에 제사가 되면서 최소한 문헌에서 이제는 '냉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냉전에 익숙해져 있다가 신냉전의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쪽은 신 냉전과 관계없는 구 냉전의 의미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정학적, 세계 체제적인(world systemic) 개념이다. 기존의 미-소 제국이 있었는데 한 쪽은 계속 되는데 우리 쪽 제국의 형태가 없어져버렸고 그 형태가 없어진 제국의 역할을 누가 과연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항상 북조선이 소련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고 있다. 북조선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 혁명세력의 양심에 부합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해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를 선전이라고 부르면 생각하기 어렵지만 선군사상에는 그런 것이 깔려있다. 남북한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체제(world system)에서의 자기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세계사 안의 나의 raison d'etat가 무엇인가? 혁명전위를 누가 해야 하는가의 의미에서 선군을 읽을 수 있다.

이 에세이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런 현상을 볼 때 다원주의에 멈추고, 다원주의를 하나의 철학으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사는 우리의 공통적, 공유하는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보는 것이다. 큐비즘은 목적이 아니다. 현대라는 모더니티를 어떻게 잘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원주의 시각이 적절한, 지나치게 급진적이지 않은, 제국 안에서 민주화하려고도 하는 다원주의 시각을 우리가 좀 애정을 두고 보면 북한의 새로운 구 냉전적 의미의 신 냉전사와 남한의 신 냉전사 의미에서의 신 냉전사, 두 역사인식이 또 다시 갈림길에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기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도 하는 듯하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차이들,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산, 재발명되는 차이들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냉전사를 부딪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무리로서 현재 씨름 중인 생각이다. 유럽에서 2014년은 매우 중요한 해인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유럽을 만든 1914년의 100주년이기 때문이다. 1918년 종전, 파리회의의 100주년도 중요하다. 방법론적으로 냉전사의 다원주의, 100주년을 지구사에 위치 짓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다. 왜 다원주의 시각이 냉전사를 넘어서서 세계사에 의미가 있을까? 1차 대전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 주요 행위자였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였다. 이 세 국가 간의 전쟁에서 미국도 '국가'로 참전하였고 러시아도 '국가'로서 참여하였다. 국가 간의 전쟁인데 사실은 또 다른 앵글에서 보면 제국들의 싸움이었다. 기존의 제국들과 이제는 제국이 되고 싶은 국가(독일)의 싸움이었다. 제국을 지켜야 하는 영, 프와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는 독일, 그리고 과거의 제국인 합스부르크, 오토만 제국 등이 있었고 국가로 참여했는데 잠깐 보니 제국이 되어버린 미국도 있다. 여기서 제국의 모습도 있었지만 서구가 인정하는 제국이 되기 위해 참전한 일본도 있었다. 제국이 되지 못했는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중국도 있었고 한국은 유일하게 동아시아에서 참여하지 못했는데 국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노무자, 총알받이로 동원이 되었다. 하나는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하나는 제국들 간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1차 대전인데 유럽의 1차 대전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지구사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유럽사 하는 쪽에서는 유럽에서 얼마나 글로벌한지를 연결해서 봐야하는데 이를 적절하게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의미로서 지역의 역사와 지구사를 연결하는 의미이다. 제국의 역사에서도 다양한 역사가 있다. 인도인들, 네팔, 세네갈, 튀니지 사람들에게 1차 대전은 '동원의 역사'이다. 중국은 5.4운동 이후 동원되었는데 현대적 의미의 중국형성의 토대가 되는 문제와 연결된다. 1919년 중국혁명이 일어났고 베트남은 1차 대전 노무자들이 들어와 반란군이 되었으며 베트남 민족운동의 1세대들이 형성되었다. 1차 대전에 동원되지 않았더라면 호치민의 존재근거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혁명의 기원은 1914, 1918이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1914와 1918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1917년, 1919년과 연결이 되면서 의미가 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1919년 월슨 민족주의에서 여기서는 3.1운동으로 나왔다. 1914-1918이 1917-19와 연결되는 식민사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식민사도 있다. 대부분은 이러한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분명한 것이 있고 불분명한 것도 있으며 연결 하고 싶은 쪽도 하기 싫은 쪽도 있다. 북조선의 헌정사는 1919년과 연결되어 있다. 김일성은 1919년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만주로 갔다. 상징적인 권력으로는 세상을 못 바꾸므로 물리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1920년도, 30년도가 새로운 역사로서 생겼다.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에게 1914-18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남의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니기 위해서는 1917-19년이

연결되고 둘이 연결되는 의미에서 1914-18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런 것이 들어가는 의미에서 냉전의 100주년에 부합하는 한 번의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동시대를 살고, 동시대의 공기를 마시면서도 살았지만 동시대의 정신(Geist) 안에 수많은, 몇 개의 중요한 정신(Geist)이 있는 다원성(plurality)의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한국에서 국제관계사를 공부하는 사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가. 1914-18년의 관계의 측면에서는 그 전후가 글로벌 냉전의 먼(distant) 기원이다. 물론 민족분단에서 체제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길은 1917년의 길을 갈 것인가, 1919년으로 갈 것인가, 1917년의 길을 갔다가 1919년으로 어떻게 통합하는가의 민족분단의 문제가 걸린다. 국제사를 하는 입장에서 유럽인들에게 그들의 말을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곳의 그 사건, 의미가 다원화(pluralized)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인류학의 다원주의적 정서는 국제정치, 국제정치사를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

전재성: 국제정치학의 모태학문답게 거시적인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신 것 같다.

신옥희: 많은 부분에서 동의한다. 질문과 코멘트를 하나씩 드리고자 한다. 하나는 제가 국제문제연구소의 <세계정치> 논문집의 편집을 맡고 있는데 다음 호의 기획호는 유사한 제목으로서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이름을 붙였다. 지역을 개념화하고 각각의 지역의 특수성이 글로벌 냉전의 규정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다룬다. 여기서 탈식민이 중요한 변수로 있다. 제가 서문을 써야 하는데 주로 두 책을 인용하였다. 웨스테드(Odd Westad)의 <The Global Cold War>와 <또 하나의 냉전>이다. 두 분이 비슷한데 신 냉전에 대한 교수님의 입장과 웨스테드의 입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

두 번째는 코멘트인데 동아시아 냉전과 연관된 것이다. 지역을 나눌 때의 고민이 있는데 동아시아를 하나로 보려고 하다가 동북아, 동남아로도 나눌 수 있다. 과연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로 뭉뚱그리는데 이 타당한 지역성(regioness)이 있는가? 문화적 다원성은 강력하게 존재해서 하나로 묶이기 어려운 것 같다. 냉전을 갖고 논문들을 썼을 때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 같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전쟁의 차이와 비슷한데 양자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시 동남아와 동북아의 지역적 차이와 유사점을 논의할 것인가? 국제정치학도 문제가 있고 인류학도 너무 스위트하다면 역사학이 매개가 될 수 있는가? 너무 국제정치학, 너무 인류학적으로 보는 것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권현익: 저도 역사학자들에 대한 기대가 많다. 역사학자들에게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 너무 어려운 부분은 역사학계가 해결해주길 바라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역사학의 특수성 때문인데 실증학문, 아카이브(archive)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카이브가 어디서, 얼마만큼 열리는지 아닌지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 듯하다. 이 또한 정치적인 문제이다. 국제관계사, 국제사를 하는 쪽을 많이 존경을 하는데 그들에게 떠넘길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인류학의 한계는 분명하다. 글로벌 히스토리를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하나? 에스노그래피가 들어가서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는 ‘ethology’가 꽃이고 최소한 1년 거주해야 한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도 간다. 거기의 정서, 에스노그래피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정치학은 새로운 것도 없고..International을 어떻게 사회이론(social theory)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 현실주의도 옛날에 하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마지막 싸움은 개념과 이론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아시아 냉전의 다양성과 특수성의 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고 국제관계학 하는 부분이 이론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웨스테드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지만 국공내전부터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중심적이다. 웨스테드와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한국인이므로 중국 중심적이지 않다. 존재성이 중국중심적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웨스타드의 글로벌 냉전은 상당 부분 아프리카, 2차 냉전(second cold war)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본적 시각은 중국적 내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다. 베트남 전쟁을 도덕적 토대로 가진 저로서는 따라가기 힘들고 정서적으로 잘 안 된다. 키신저와 베트남 전쟁의 관계를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키신저가 중국을 글로벌 중국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베트남의 관점에서는 그로 인해 수백 명의 인명이 살상되었다. 그 여파를 보면 인류학자의 입장에서는 산더미 같은 인간의 비극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 1972년으로 세계가 바뀌었고 end of cold war, rise of China의 담론들이 존재했다. 1972년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를 'the' history로 보는 시각이 중국의 국가적 시각인 듯하고 웨스타드가 이를 영어권으로 가장 정교, 온건하게(modest) 정돈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웨스타드의 계보는 중국의 국공내전과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시각이고 이는 북구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북구는 독립적인 의미에서 유럽의 변방에 있지만 부유하고 독립적, 제국의 참여의 역사가 없다. 노르웨이의 노벨 연구소 등은 서구의 양심의 입장에서 평화연구로서 접근한 시각이다. 그런 흐름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동서가 연결되는 신 냉전사를 할 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남북-동서의 관계성에서 이를 왜 하는가의 질문을 북구 지식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고 국제적 자유주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상유지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동서-남북의 형성은 세계의 문제, 학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 사회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재론적(existential)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듯하다. 글로벌 냉전사가들 중에 새로운 세대가 나와야 하고 제가 바라는 것은 글로벌 냉전사에서 한국에서 글로벌 학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야 이야기를 새로운, 재밌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듯하다. 아니면 또 다른 제국적 논의에 휩쓸릴 수 있다.

조은정: 지금까지 다원성, 다양한 종류의 냉전의 역사에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이야기로 보았다. 그런데 왜 The another cold war이 아니라 The other인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과 그 뒤의 한 면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렇게 하면 다원성이 닫혀진 느낌이다. 지난번 연구회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탈식민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라틴아메리카는 우리 중심으로 봤을 때 제 3세계,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되었다가 바뀌었다. 그런데 The other의 생각에서 다시 닫히는 느낌이다.

그리고 2부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선생님의 다원성이라는 것은 지적 기원을 찾다보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다른 책에서는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이야기를 다루셨는데 기어츠의 극장국가론이 냉전의 역사, 다원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든다. 방금도 동아시아, 유럽을 비교했는데 유럽의 근대국가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내재된 폭력성, 물질화된(materialize)



것, 힘의 원천적인 토대가 물질화될 수 있었던 것이 있고 나중의 전면전도 가능해진 국가의 규모, 동원성, 정치권력의 기구 등 이런 것들에 집중해 와 있었다. 기어츠가 그게 없이 '상징'이라는 퍼포먼스(performance)만으로도 동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 기어츠가 영향 받고 여기서 유럽 이외의 지역이 있고 유럽만 국가 상태가 주권을 가진 표준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한 논의를 여기서 가져오신 것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나? 지난 초청강연의 김은중 선생님의 관점주의는 달랐는데 브라질의 비베로스 카스트로의 관점주의, 현재진행형인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주의를 논의하셨다. 이러한 논의와 같이 냉전사에서 선생님의 냉전사에 대한 관점에서 더 나아갈 여지가 있지 않은지 생각한다.

권현익: 원래 책의 제목은 decomposition이라고 했다. 사람의 몸이 de-compose하는데 우리가 3년 상을 치루는 것은 de-compose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없어지는데 없지도,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3년 이후의 상징적 과정을 어떻게 형성(form)하는가? 여기서 re-compose하는 쪽이 나온다.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웨스테드의 <The Global Cold War>에 대한 반대로서 <The Other Cold War>로 가게 된 것이다. 사실은 새로운 또다른 무언가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Global Cold War에서 중심-변방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정말 foreground-background가 불분명해지는 큐비즘적인 Global Cold War를 의미했다. 비슷한 의미에서는 The Other Cold War가 맞는데. 원래는 Decomposition of Cold War였다. 원래는 1차 대전을 생각했다. 1919년이 이집트, 중동,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진정한 의미의 혁명적 민족국가의 논의가 되었는데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혁명적 민족자결주의를 이야기하고 전격적인 내전을 겪지 않다. 독재(dictatorship)를 넘어서서 더 기원, 부분에서는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깊은 냉전사, 장기적 냉전사(long cold war history)를 봐야 한다. 한국은 변방에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의 형식으로 되는 과정으로 간 차이를 자꾸 보게 되었다.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장기적 냉전사(long cold war history)를 하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 라틴아메리카도 다시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권력, 상징적 권력은 중요한 주제이다. 기어츠가 이를 쓰게 된 것은 50년대 말, 60년대 중반까지 수카르노를 관찰하면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군을 장악했는데 대중적인 힘이 있었는데 무장투쟁, 영웅으로서의 상징적 권력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서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고, 그 중심을 없애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사회가 1960년도에 엄청난 피를 보게 되었다. 기어츠의 수카르노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물리적 권력이 아니라 상징적 권력 차원에서 도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에세이를 미국의 정책과 관련된 대중 지식인들이 보았을 때는 그 메시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권력만으로 제 3세계를 재패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는 것이다. 이 세계에는 레토릭하고 상징적 권력이 중요하므로 그들의 문화에 내재된 인도네시아적인 구조적 파워, 이를 알파하게 이를 건드리면 엄청난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이다. 이를 '인도네시아적'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어츠가 당시 예일대의 정책 관련자들과 교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했다고 보인다. 북한의 연구에서도 상징적 권력이 극장국가론을 넘어서 약소국에서 레토릭으로 권력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레토릭은 동원력인데 국제정치학은 물리력 중심이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군사력, 얼마만큼 '금'을 가지는지, 군대의 수를 가지는지 등등을 다루는데 한국의 학자들에게서 현대사에서 장벽에 부딪치는 부분은 물리력으로 들어다가 자꾸 얽매어있다는 것이다. 분석적인 부분의 권력이 있지만 때때로는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하

는데 그런 의미에서 레토릭, 상징적 권력이 중요하다. 1917-19년을 이야기했는데 국제정치를 넘어서 분단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생각하면 두 개의 '총'이 있다. 물리력과 상징적인 권력으로서 1919년의 만주로 갈 때의 두 개의 총을 생각할 수 있다. 저는 안동 출신인데 안동에서는 1919년 3.1 운동과정이 있었다.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조직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할아버지들, 중고등 학생들, 할머니들이 깃발을 흔들었었다. 그 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상징적인 실천(symbolic practice)을 하면 현실이 앞에서 만들어 질 것처럼 생각하였다. 물질적인 담론으로서 할머니가 '만세'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였을까? 한국 국제정치사학도로서 글로벌하게 싸움을 하려면 물질적 권력에 대한 완전한 집중은 이러한 사고를 옥죄일 것이다. 여기서 1914-18년은 유럽의 천만 명의 물리력의 광란이었다. 그 광란의 가려진 곳에서 월슨의 레토릭 파워가 나타났다. 월슨의 이야기를 통해 아래로부터 어느 동네의 할머니까지 온 세계에서 '민족자결' '민주'라는 말로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인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1919년에 논의되는 현상이었다. 아주 평범한 할머니들이 완전히 직관적 실천(intuitive practice)을 했다는 의미에서의 국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글로벌한 영역에서 글로벌 학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승희(이화여대 박사과정): 탈식민 냉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다. 중일 국제관계에 대해 연구하는데 전후처리와 냉전의 교차과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연관되는 문제로서 샌프란시스코 전후처리가 일본에게 관대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논의되었었는데 그 안에서 미국, 영국의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냉전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시각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현익: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독도 문제이다. 여기서 개념보다도 실천적인 이야기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로 들어와서 이 부분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신옥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영역과 우리의 차이의 문제로서 이를 동아시아 영역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과 갖는 여러 국제관계학적인 것도 있고 친분, 워싱턴의 일본학 했던 사람의 정책의 영향도 있고 여러 차원(dimension)이 있다. 미국에서의 일본학의 지정학적 파워가 증폭되는 부분으로서의 차원도 있고, 미국과 영국, 호주도 개입한 부분도 있다. 영 연방과 미국과의 시각 차이가 샌프란시스코 회의와 직접연결되는데 사실 구제국과 신제국 사이의 동침하기 어려움이 드러났다. 동침하기 어렵는데 자는 모습이 이상한 관계이다. 그런 것을 포함하면서 동아시아의 균열문제를 글을 쓸 때 접근방법이 중요한 듯하다. 마조어(Mark Mazower)가 UN에 대한 새로운 책을 냈는데<No Enchanted Palace: The End of Empire and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United Nations, 2013>, 1947년-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우리는 미국 중심의 유엔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UN의 안에서 유럽 제국인 프랑스, 영국의 입김에 얼마만큼 미국이 썩어 나갔는가의 질문을 한다. 기존의 제국들인 영, 불의 입김을 하나의 틀로서 보는데 기존의 실패한 제국은 독일이 아니다. 당시 독일은 제국이 없었고 일본은 제국을 했었다. 그 안의 일본의 제국의 평정권을 동아시아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고 영국의 중동에서의 평정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과 같은 틀이 있었다. 지역사를 이해하고 쓰기 위해서 다른 국제적 지역사(international regional history)를 들어와서 지구사(global history)를 쓰는 것처럼 해야 할 것 같다.

이중구: 북한의 냉전의 시각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탈냉전기 북한이 소련을 대표, 대신한다고 하는 담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북한의 탈냉전은 일극세계의 도래로 북한에게 더 위험해졌다고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냉전에서 탈냉전의 말을 하기까지 소련을 따라서 외교노선을 따라 가면서 미국과 관계정상화, 한반도 핵무기 철수를 쫓 하려고 했던 듯하다. 국제관계에서 고립되면서 과거의 소련의 국가를 해줄 국가가 없어서 스스로 나가는 것도 있다. 냉전의 다원주의 시각을 탈냉전의 다원주의 시각과 연결할 필요가 언급하셨는데 냉전과 탈냉전을 연결시키고, 다원주의를 연결할 때 그 개념에서 북한을 보는데 조언해주실 것이 있는가?

권현익: 북한에 관해서 좋은 역사자료가 안 나오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 1992, 93년 초까지 소련/러시아, 북한 간 관계에 대해 동유럽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부분을 쓰는 사람이 아직 없다. 분명 두 가지 마인드가 북조선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홀로 갈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을 듯하다.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홀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권력 승계가 그 이후부터 안 되고 별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런 과정에서 두 갈래의 길 중에 선택이 되었다. 새로운 별을 위해서 다른 길을 가지 못했다. 과거의 별이 있었다면 이 쪽 저쪽의 고민이 되었겠지만 새로운 별은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반서구 운동과 함께 문화 전체적으로 새로운 별을 내세웠는데 민족의 별로는 힘이 안 되기 때문이다. 민족의 별이면서 세계의 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별만큼 빛을 내는 별이 되려면 다른 한 쪽을 따라가기 어렵다. 그 시기의 외교문서가 나오면 좋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계승적 권력(successional power)의 특수성이 있는 의미에서의 변화과정이 있을 것 같다. 냉전과 탈냉전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북조선 연구로서는 연속적인데 오히려 동유럽 등에서 겪은 것 이상으로 엄청난 단절을 겪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과연 냉전이 세계적으로 종식된 상황에서 기존의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변환하는 것이 더 쉬운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끌고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는 것이 더 쉬운가? 지구적 파열(global rupture)의 과정에서 로컬의 연속성이 정말 연속성인지 아니면 불연속성인가? 동유럽의 무너짐은 불연속성인가 아니면 연속성이 강한가? 이에 대해서 초보적, 근본적, 본래적인 개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